

건설동향브리핑

제506호 (2015. 4. 13)

■ 정책 · 이슈

- 중동순방 성과이행 및 확산방안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 주요 내용

■ 경영 · 정보

- 건설업 비정규직 증가, 체계적 관리 필요

■ 경제 동향

- 1~2월 주택매매 거래량, 집계 이래 최대치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란 : 기술형 입찰, '확정가격' 방식을 검토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중동순방 성과이행 및 확산방안 분석¹⁾

- 해외건설 · 플랜트 고부가가치화 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

■ 중동순방 성과 지속 확산 위해 35개 후속 과제 선정

- 정부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3.19)를 통해 ‘중동순방 성과이행 및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35개 관련 후속과제를 선정함.
- 정부는 ‘이번 중동순방이 그동안 추진해온 국내 투자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대내외를 포괄하는 투자 및 경제 활성화의 양대 축을 완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힘.
 - 주요 내용은 ‘해외건설 · 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환’,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활성화’ 등임.
 - 특히, 해외건설 · 플랜트 분야는 금융지원 강화와 공기업 역할 확대 및 R&D ·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수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함.

■ 수익성 제고 위해 금융 및 신시장 개척 지원 확대

- 해외건설 · 플랜트 수주 규모는 그동안 적극적인 해외진출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최근 유가 급락에 따른 산유국의 재정 악화로 인해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해외보증 등 금융지원은 미흡하고 민간 금융기관은 해외사업 참여에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중동시장과 플랜트 분야에 의존하는 수주구조에 따른 국내 기업 간 경쟁심화와 현지인력 고용 요구 증가,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미흡 등으로 인해 수익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금융지원 확대 방안으로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간개발은행) 등 해외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자금지원 규모를 확충키로 함.
 -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올해 정책금융 규모를 각각 27.5조원과 10.7조원으로 전년비 증액하고, 다자간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규모 확대(2014년 52억 달러, 2015년 70

1) 본고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중동순방 성과이행 및 확산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 10억 달러) 및 40억 달러 규모의 무역보험공사 On-Guarantee 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
 - 정책금융지원센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리스크를 분담하는 이행성 보증(3,000억원)과 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을 이용해 민간 금융기관이 해외진출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간접대출 제도(1조원)를 도입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 투자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업을 지원한 민간 금융기관에 우선 상환하는 우선상환제 프로그램 확대와 프로젝트 완공 후 발주처의 중장기 채권 발행에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을 제공하는 중장기 채권보험을 도입해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 유도
- 신시장 개척 지원방안으로는 수주외교 강화와 신시장 진출 위험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리스크가 높은 국가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새로운 분야 진출 확대 유도
 -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세계물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연계해 발주처 초청 및 정상회담, 고위급 수주지원단과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주 외교 확대
 - 진출국의 전쟁, 송금불능 등의 고위험을 보장하는 해외투자보험 범위를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국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고려해 적극 지원
 - 운영 및 시공감리는 공기업이 설계와 시공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는 방식의 컨소시엄을 확대해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해외 진출 유도
- 투자개발형 사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R&D 투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강화할 계획임.
 - 외화 인프라, 글로벌 코퍼레이션, 글로벌 인프라, 에너지·인프라 펀드 등 16억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글로벌 해양펀드 및 개도국 수력발전 투자펀드 등 특성화 펀드 추가 조성 계획
 - 사업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건설 및 운영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패키지 금융 규모를 2014년 9.8억 달러에서 2017년까지 12억 달러로 확대 예정
 - 플랜트 최적 공정설계 및 안전설계, 해양플랜트 설치 및 해체기술 개발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발굴 선별하여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특허 확보 추진
 - 해외건설 및 플랜트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하고, 설계 및 용접 등 기술 전문인력 5,500명을 추가로 양성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 주요 내용¹⁾

- 건설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 신유형 거래 분야, 공공 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를 위해 다음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시함.
 - 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
 - ②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강화
 - ③ 신유형 거래 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제고
 - ④ 공공 분야의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⑤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 ⑥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구현

■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

-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중소기업의 중점 애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 강화
 - 하도급대금 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윗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
 - 피해 중소기업이 보복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의 자율개선 유도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 공정거래협약 이행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율준수문화 확산 및 우수업체의 평판을 제고
 - 업종의 거래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시 공정거래협약의 평가배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²⁾

1) 본고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5.2.2)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 2회로 게재 예정이며 본고는 1회차임.

2) 1월 7일 모든 업종의 평가배점을 4점씩 확대함(예 : 8점→12점, 건설업).

-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매출 기준의 확대 등 분쟁조정제도³⁾를 활성화하고, 모범·실패사례 공유 등을 통해 분쟁조정 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
- 일정규모 미만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하도급법」 개정 추진
 - 중소기업에 갇혀 있는 중견기업의 성장통 완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 회수 등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인정⁴⁾

■ 신유형 거래 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제고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지식재산권(주로 특허) 등 신유형 거래 분야는 창의와 혁신이 활발하면서도 독과점이 쉽게 형성되어 불공정행위 피해 발생 가능성도 크며, 건설업도 ICT 융합 등으로 예외가 아님.
 -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⁵⁾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
 -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 지식·정보성과 이용 관련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⁶⁾를 점검할 예정

■ 공공 분야의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공공 부문 전반의 불공정행위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국가 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
 - 2015년 현재 공기업 수는 국가 공기업 302개, 지방 공기업 398개에 달함.
 - 상반기 중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규모 발주 공기업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
 - 주요 범위만 유형 사례로 퇴직자 설립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행위 등을 제시함.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3) 「하도급법」 제2조에 의한 당사자요건이 충족되는 건에 한하여 건설업의 경우 원사업자의 규모가 토건 도급순위 150위 미만이거나 전문건설업체 간 분쟁, 제조업의 경우 연간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업체 간 분쟁 건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요청하고 있음.

4) 의원입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 통과시 상당수 중견기업들도 납품일로부터 60일 내 대금수령이 보장됨.

5) 예를 들어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를 부당하게 특허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등임.

6) 부당특약, 서면 미교부(구두계약), 부당단가 결정, 대금 미지급 등임.

건설업 비정규직 증가, 체계적 관리 필요

- 비정규직 근로자 직무 소진으로 조직 성과에 큰 영향...상사 및 동료 지원 중요 -

■ 직장인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 기업은 최근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인 조직 변화를 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특징이 비정규직의 증가임.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증가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가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요구,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과거부터 유지해 온 정규직 위주의 고용 관행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킴.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97년 607만 4,000여 명이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1년에는 696만 2,000여 명으로 15% 증가했으며, 2014년 8월 현재는 607만 7,000명에 달하고 있음.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4%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장인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셈임.

■ 비정규직 증가는 직무 소진으로 연결, 기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

- 비정규직의 활용으로 조직은 인력 유용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대적인 고용 불안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 결여 등을 야기함으로써 구성원의 직무 소진을 유발하게 됨. 결국 이는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직무 소진은 장기적 스트레스의 산물로서 신체적·정신적 반응의 집합체이자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고갈을 의미함. 이는 정서적 소진(Exhaustion), 냉소주의(Cynicism), 직업 효능감(Professional Efficacy) 감소 등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됨.
- 정서적 소진은 과도한 심리적 부담 또는 요구들로 인해 개인의 정서적 자원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에너지 결핍을 의미함.
- 냉소주의는 감정 고갈로 인해 자신의 직무에 부정적이고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임.

- 직업 효능감 감소는 직무상의 성취감 부족으로 생기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임.

■ 조직 내 상사와 동료의 지원 중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 소진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상사와 동료의 지원이 있음.
 - 선행 연구¹⁾에 의하면 상사와 부하 직원의 인지적 일치감(Perceptual Congruence)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상사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좋을수록 구성원은 조직의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료와의 활발한 접촉은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지원에 가장 유익한 근원인 것으로 연구됨. 많은 선행 연구²⁾에서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할수록 직무 소진을 덜 경험하게 된다고 함.

■ 체계적 직무 소진 예방 필요

- 수주 · 기술 등 모든 영역이 사람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는 건설업의 특성상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조직 구성원 10명 중 5명(52.5%)이 업무로 인해 완전히 탈진하고, 66.4%는 퇴근할 때 완전히 소진된 느낌을 갖게 된다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³⁾를 고려할 때 건설업 내에서 늘어나는 비정규직 근로자⁴⁾에 대한 직무 소진 예방은 중요한 사안임.
- 조직 내 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통해 단기적이고 명시적인 고용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조직 내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켜준다면 직무 소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임.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

1) White, M. C., Crino, M. D. & Hatfield, J. D.(1985),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Parsimony of Perceptual Congruence Sco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8(9): 732~737.
Muller, B. H. & Lee, J.(2002), Leader-Member Exchange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 Multiple Context, The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9(2): 220~244.

2) Leiter, M. P. & Maslach, C.(1988), The Impact of Interpersonal Environment on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9: 297~308.

3)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마크로밀엠브레인사가 지난 2015년 2월 6일, 전국 만 15~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4)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 자료(2014.7.10)에 의하면 300인 이상 건설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7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2월 주택매매 거래량, 집계 이래 최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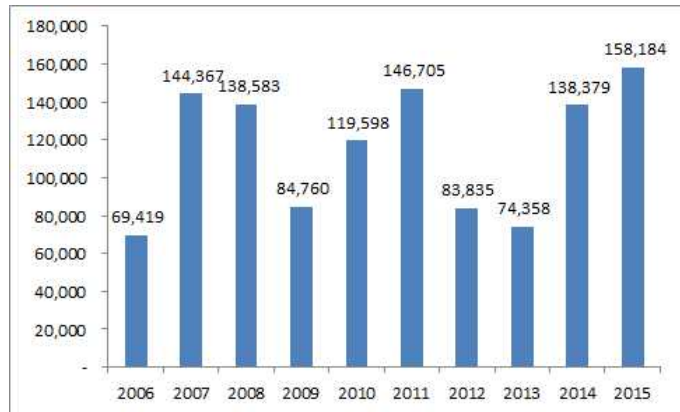
- 최근 1년 주택 매매 패턴 아파트, 중형, 외지인 구매 비중 상승 -

■ 1~2월 주택매매 거래량 집계 시작 이래 최대치

- 1~2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15만 8,1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1~2월 거래량 중 최대치를 보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 7만 1,803건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이며, 지방은 8만 6,381건으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중은 수도권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은 감소세를 보임.
-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비중이 각각 72.9%, 27.1%이며, 아파트 거래량은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임.
- 규모별로는 소형, 중형, 대형의 비율이 45.3:36.1:18.6이나 중형과 대형은 최대 거래량을 보임.

<각 연도별 1~2월 주택 매매 거래량>

(단위 :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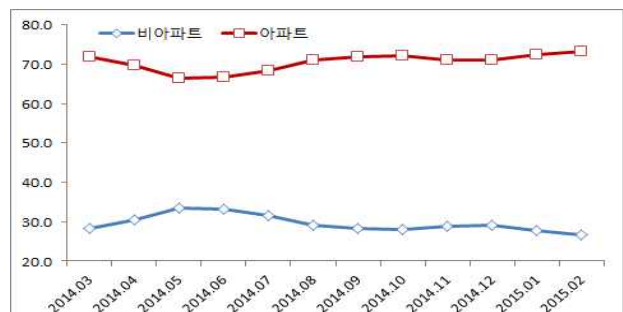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 최근 1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아파트, 중형, 외지인 구매 비중 상승

- 최근 1년 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아파트, 중형, 외지인의 주택구매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
-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최근 1년 간 월간 4만 9,000~8만 호 내외의 거래를 나타냄. 비중은 2014년 4월 66.6%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2015년 2월 73.4%를 보임.

<전국 유형별 주택매매 거래량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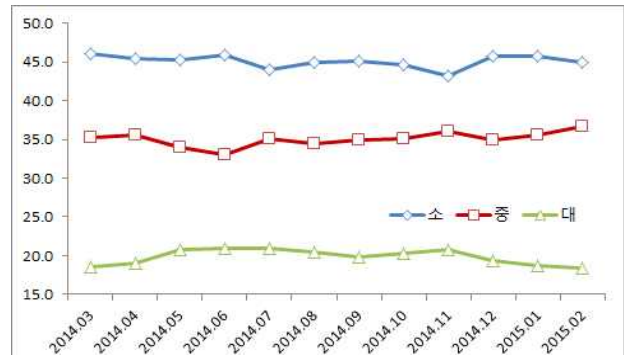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 규모별로는 소형이 4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형의 비중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2015년 2월 36.7%로 최근 1년 사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매입자 거주지별로는 대부분 관할 시도 내에서 매입이 이루어진 가운데 최근 그 외의 지역(관할시도 외)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이 상승함.

<전국 규모별 주택매매 거래량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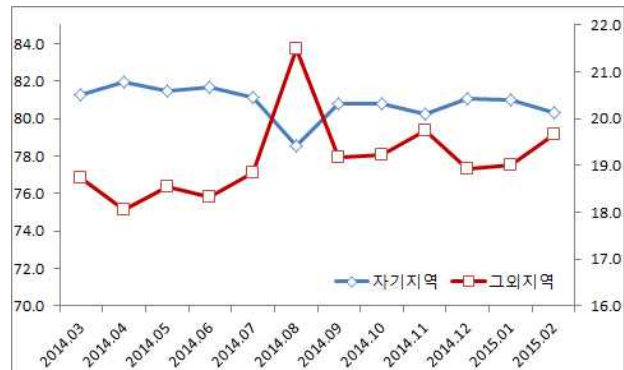


주 : 소형 60㎡ 이하, 중형 60~85㎡, 대형 85㎡ 초과임.

- 수도권은 최근 1년 간 아파트, 중형, 수도권 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상승함.
- 지방광역시는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그 외의 지역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상승한 가운데 규모별로는 소형:중형:대형의 비율이 4:4:2를 유지함.
- 기타지방은 지난해 말부터 비아파트, 중대형, 그 외의 지역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상승함.

<전국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매매 거래량 비중>

(단위 : %)



주 : 자기지역은 좌축, 그 외지역은 우축임.

자료 : 국토교통부

■ 거래량 증가와 함께 매입 유형도 변화

- 금융위기 이후 침체 되었던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중형, 외지인의 주택구입 비중이 증가하면서 최근 재고주택시장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 소형,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주택에서 매입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최근 실거래가로 거래된 주택을 살펴보면, 아파트, 중형,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중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분양시장과 더불어 재고주택시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됨.

엄근용(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내용
4. 3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참여 -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민간투자시설사업 분쟁조정 등
	대한토목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대비 효율적 북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전략 구축회의’에 기획조정실 박용석 실장 참여 - 연구과제 논의 등
4. 6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TF 2차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불공정관행 개선방향 논의 등
4. 7	국회 은수미 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현장 외국인근로자 정책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건설 현장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한 현황 및 해법 논의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경제분과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향후 활동 계획 논의 등
4. 8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제2차 해외건설 정책자문위원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참여 - 제2 중동봄 조성방안 관련 논의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 2차 개설

- 기간 : 2015. 4.21(화)~23(목) 3일 간
- 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교육 내용 : 민간투자사업(BTO/BTL)에 대한 이해와 추진전략, 사업성분석 및 제도 등 실무 중심
- 문의 및 참조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02-3441-0691, 0848), 홈페이지(www.cerik.re.kr)

■ 「CERIK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연구 결과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
- 도서 회원에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정책 연구 자료 및 각종 연구 발간물, 정기 간행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수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기술형 입찰, ‘확정가격’ 방식을 검토해야

최근 턴키나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유찰 사태가 빈번하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공사비 부족이 가장 먼저 지적되고 있다. 턴키 공사는 설계도면 없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과소 책정되는 사례가 많다. 설계변경 등이 곤란하여 시공자의 리스크도 매우 높다. 더구나 최근 담합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술형 입찰을 기피하는 풍토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형 입찰은 가격점수와 기술점수의 가중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그런데 설계점수는 큰 차등이 없는 반면, 가격점수는 최저 투찰가격과 대비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차등이 크게 벌어진다. 즉, 덤핑 투찰을 통하여 설계점수를 가볍게 뒤집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무리한 적자 수주가 나타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간 담합이 유인될 수 있다. 이는 기술경쟁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낙찰자 결정에 있어 품질기반선정(Quality-Based Selection) 방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조달 방법을 보면, 확정된 예산 하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공공공사에서도 턴키의 낙찰자 선정 기준을 보면,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덤핑 낙찰이나 입찰자 담합을 해결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확정가격’ 방식이 입찰자에게 유리하며, 극단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정가격 방식은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 기술에 의한 편익을 발주자가 향유할 수 없다. 특히 자재비나 노무비 상승 등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확정가격이 불합리할 수도 있다. 만약, 사업 규모나 요구 성능이 제시된 상태에서 확정가격이 낮게 설정된다면, 고품질의 설계나 시공이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가격에 대한 설계(Design-to-Cost)로 표현하기도 한다. 즉, 확정가격이라고 해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는 없다. 이론적으로는 확정가격에 맞추어 가장 높은 품질의 설계를 한 자가 낙찰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턴키나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덤핑 낙찰이나 담합 등을 방지하려면 발주자 측에서 적정 가격을 지불하려는 의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처별로 개산견적(Rough Estimation)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사원가 전문가 양성 등이 중요하다. <건설경제, 2015. 3. 9>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